

부산상의 '전북 발목잡기' 정치공세

김광수 "좌시하지 않을 것" 금융중심지조성 반대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부산은 선박 금융과 파생상품, 백오피스 등에 특화된 금융중심지이고 전북은 농생명과 연기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이 다르다"며 "각기 다른 분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아래 상생과 협력

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산지역만을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각 지역을 순회,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으며 선물보따리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새만금 신공항 반대발언 논란과 세종시 KTX역 신설 문제 제기, 충청도를 중심으로 충청권 국제공항 추진 등 전

북에 민감한 목소리가 집권여당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며 "전북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발목잡기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북현안사업이 표류되는 것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혁신도시 시2추진계획으로 각 지역들의 유치경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된 전북지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핵심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지역임을 정부는 명심해서 이전 지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국박산업진흥회의 참석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경상남도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육포조선소에 정박한 천지보함 차량감판에서 열린 국박산업진흥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축분뇨, 친환경 자원 재탄생

남원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오랜 '골칫덩이'였던 가축분뇨가 친환경 자원으로 탈바꿈된다.



이우호 의원(남원·임실·순창·사진)은 지난 14일 남원 2019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국비 등 총 사업비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기성 폐기물인 가축분뇨를 이용해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 확정으로 남원 수지면 남창리 일대에 처리시설이 설립되고, 하루 약 99톤, 연간 약 3만6천톤에 달하는 가축분뇨가 100% 자원화 될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9.13 정책 단기처방 불과'

유성엽, 부동산 폭등 잡을 수 없어... 부작용 우려



이 되어야 지역 간 격차와 국민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특정 지역의 투기세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7억 선이고, 전세가가 4억이 넘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전세 자금대출 제한 등의 과도한 제한이 자칫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영원히 서울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정책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금 올리고 대출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처방이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역사 주택, 역세권 개발, 신 버블세븐을 만들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진성 기자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9.13 부동산 대책안 가지고는 실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으로 동감한다면, "부동산 투기의 근본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너무 현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서울 부동산 폭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분

제가 아니라 지적하면서, 첫째, 국내경기 부진으로 산업 전반의 수익률이 하락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산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간 점, 둘째, 강남지역의 투기열풍이 다른 여러 지역으로 전이된 점을 들었다. 특히, 유 의원은 강남지역의 지속적인 부동산 오름 현상이 근본적으로는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세입은 5,655억 수준으로 같은 서울 도봉구 330억의 17배 수준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부세 세율 올리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차체에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이를 국가가 나누어주는 방식

아이들이 위험해... 아동학대 증가세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작년 1091건 발생

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4~2017년에 818건, 어린이집은 2013~2017년 2356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유치원은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잠정치) 27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잠정치) 81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만 무려 작년 109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고발생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의 경우 2014년부터 관련 통계의 집계기 시작돼 4년 동안의 자료가 있을 뿐, 지역별로는 구분되지 않았다.

특히 문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 피해 아동의 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점이다. 폭행현황에 함께 있었던 아동들 역시 충격을 받게 돼 유아기 인격형성 과정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도 지난 12일 41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교사의 처우 개선과 체계적인 교원양성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들고 있다.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유아의 수가 매우 많아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낮은 수준의 급여로 인한 이종고가 확대되고 있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도 직결된다"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 정부의 교육혁명 정책에 맞게 교원 양성과정 지원과 처우개선에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혐의 전면 부인

"정치적 문제있는 기소" 반발

자신의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에 부정하게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현) 심리로 열린 염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염 의원 측은 이같이 밝혔다.

염 의원 측은 "해당 지역구 의원인 건 맞지만, 보좌진 등을 통해 강원랜드에 청탁한 적 없다"며 "내부적으로 이뤄진 교육생 채용 절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랜드 사이에 어떤 권한 행사나 역할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라며 "수많은 외부 청탁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혀 기소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라고 반박했다.

염 의원은 '본인 의견도 같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선 "정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46)씨를 통해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염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8·강원 강릉시) 자유한국당 의원 측도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10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염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1일 열 예정이다. /뉴스1

고향의 정, 마음의 정, 남원 농·축산물입니다.



NAMWON

SPECIALITY

